

요르단 총선 결과 및 향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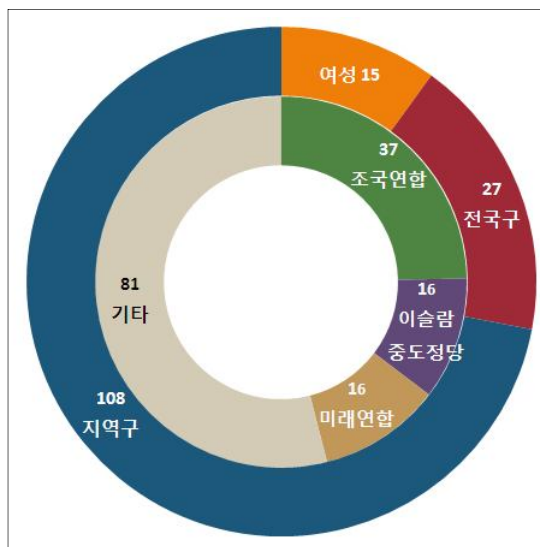
작성자 : 박재은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2월 26일

■ 2013년 1월 23일 제17대 요르단 하원의원 선거 결과 이슬람중도정당(Islamic Centrist Party)이 최대 정당으로 부상하여 향후 보다 민주적인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.

- 기존 최대 야당이었던 이슬람행동전선(Islamic Action Front)이 선거에 불참하여 총 16석을 확보한 이슬람중도정당이 하원 내 최대 정당으로 부상함.¹⁾
 - 정당 정치가 정착되지 않은 요르단에서는 지역 및 부족을 기반으로 한 무소속 의원들이 전통적인 정치인이자 친왕정 세력으로서 여당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하원 내 역학구도는 선거 이후 형성되는 정치연합(bloc)에 따라 결정됨.²⁾
- 이슬람중도정당이 조국연합(Watan bloc), 미래연합(Future bloc)과 함께 최대 규모의 정치연합대를 구성함에 따라 반정부 세력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민주적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.
 - 이슬람중도정당은 다른 이슬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패 방지, 민주적 개혁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슬람행동전선에 비해 온건한 성향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.

그림 1. 요르단 하원 의석수 및 정치연합 현황



1) 이슬람행동전선은 요르단 무슬림형제단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요르단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치 집단임.

2) 조국연합, 미래연합 등의 정치연합은 선거 이후 무소속 의원이나 군소정당 의원들이 결성한 연합으로 정당과는 다름.

자료: 각종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(2013.2.14 기준).

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야권과 이슬람행동전선은 경제상황 개선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하원 선거 및 정부 구성에 불참하기로 결함.

- 요르단에서도 '아랍의 봄'의 여파로 2011년 1월 이후 매주 금요일 예배(jummah)를 마친 뒤 청년,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, 이슬람주의자 등을 중심으로 시위가 지속되어 옴.
- 시위 초기에는 식료품 및 유류의 물가상승 억제, 실업률 개선 등 경제 관련 요구였으나 점차 선거법 개정, 부패 척결, 왕권 축소 등 정치 관련 요구로 확대되었고 최근 일부 시위대는 압둘라 국왕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함.
 - o 2012년 11월 요르단 정부가 50억 달러(GDP의 약 6.5%)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가스와 기타 유류에 제공하던 보조금을 각각 50%, 33%가량 삭감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점차 격화됨.³⁾
- 특히 이슬람행동전선은 친왕정 세력에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정당 기반의 전국구 의석을 최소 45석(30%)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부가 17석에서 27석(18%)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정치 참여를 거부함.
 - o 그러나 2012년 7월 선거법 개정으로 요르단 국민은 1인 2표를 행사하여 총 15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게 되었고, 의석수가 전국구 27석, 지역구 108석(소수민족 12석), 여성 15석(베두인 여성 3석)으로 확대 조정되어 소수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다소 개선됨.

■ 이번 선거는 2011년 '아랍의 봄' 발생 이후 요르단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로 향후 정부 정책이 역내 정정불안의 국내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.

- 반정부 시위의 확산과 최대 정당인 이슬람행동전선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하원선거보다 3%포인트 높은 56.7%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친왕정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선출되어 국왕 퇴진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.
 - o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과 달리 동안(East bank) 출신의 요르단 원주민들은 여전히 압둘라 국왕과 입헌군주제를 지지하여 체제 변동의 가능성은 낮은 편임.
- 하원은 향후 경제 상황 개선을 통한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야권 세력과의 조율을 통해 국내 정치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.

〈자료: The Jordan Times, BBC 등〉

3) Buck, Tobias. 2012. "Protests in Jordan after fuel subsidy cut." The Financial Times. (November 14)